

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판단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9.28.(월) 문화일보(온라인), “노란봉투법 회의 5번에 혈세 2000만원 썼다”
매일경제(온라인), “노란봉투법 판단지원위, 회의 5번하고 수당
1700만원 챙겼다”

- 위원들은 회의 한 번에 평균 47만4000원에 이르는 자문 수당을 받았다.
5번의 회의에 모두 참석한 5인의 위원은 각 237만원의 수당을 받아갔다.
- 회의도 정부나 유관기관 회의실이 아닌, 레스토랑에서 개최했다. 지난 3월 5일
열린 1차 회의는 서울 중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열렸다.
- 지난 15일 기준, 판단지원위는 접수 질의(해석요청) 170건 중 115건(68%)을
종결 처리하고, 55건을 현재 검토 중이다.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
사건은 10건(5.9%)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더구나 검토 중인 건도 즉시
판단이 안 되고 있다. 일례로 판단지원위는 지난 3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의
사용자성 판단 요청에 5개월 넘게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.

2. 설명 내용

-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,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
높이기 위해 법률 및 현장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
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
- 위원회는 원·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
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관하여 검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
자문기구임

□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및 회의 안건 수에 비례한 안건 검토* 등 전문적 자문 제공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심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,

* 회의 1회당 평균 안건 검토 수: 3.5건

- 회의는 참여 전문가들의 일정을 고려 이른 시간(오전 7시 30분~)에 개최할 필요가 있고,
- 회의 가능 여부, 접근성, 참석자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찬 및 회의 진행이 동시에 가능한 회의실 대관 및 음식 업체를 이용하였음

□ 원·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은 원하청 계약 관계, 교섭 의제에 대한 구조적 통제, 해당 업무의 조직적 편입 및 경제적 종속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임

- 특히 노사 간 견해 차이가 큰 사안인 만큼 노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보완과 노사의 의견 청취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음
- 정부는 그간의 위원회 검토 사례와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보다 효율화하고 유사 판단 사례를 축적·활용하여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	책임자	과 장	강승헌 (044-202-7611)
		담당자	사무관	서관범 (044-202-7607)